

KERI Insight



미·중 전략경쟁 양상과 한·중 협력방안 시사점

신 원 규

한국경제연구원
(wkshin@fki.or.kr)

김 동 현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dhyunkim@yonsei.ac.kr)

본 연구는 트럼프 2기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와 이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대응을 분석하고, 2026년 5월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다층적 관세체계를 부과하는 한편, 첨단기술 수출통제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은 전통적인 제조업 마찰을 넘어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미·중 간 충돌 영역이 다각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기점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정책에서는 '신질(新質)생산력(혁신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업정책에서는 미국 의존도 축소 및 교역국 다변화와, 중앙·지방정부 주도의 주요 산업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통상·안보정책 측면에서 핵심광물 수출통제와 역외관할권 적용으로 협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거시경제정책에서는 사

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내수 중심 구조로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대외 의존도 축소와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대미 압박에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강화된 중국의 협상력으로 인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갈등의 해결이 아닌 관리로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었다. 양국은 핵심 경제안보 영역에서 회토류 및 첨단기술의 대치구도와 원론적 선언을 유지한 반면, 안보 리스크가 낮은 비민감 영역에서는 농산물 대량 구매와 보잉기 도입 등 실리적 거래인 미니딜을 성사시켰다. 결과적으로 전면적 갈등은 회피하면서 안보 민감도와 거래 가능성에 따라 관계를 긴밀히 관리하는 협상 틀이 정착되었다. 하지만, 이는 누구도 우위에 있지 않은 현 상황에 기인하며, 타협이 아닌 충돌 회피로, 역설적으로 충돌 영역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한·중 협력은 안보 민감도를 기준으로 이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보 민감 영역은 공급망의 상류·하류, 진출 대상 국가(미국, 제3국, 중국내수)를 구분하여 양국 협력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핵심광물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공급망은 단기 안정 공급과 장기 중국 의존도 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안보 영역에서는 정상회담 MOU 이행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실버경제 등 신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특히 향후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는 중국의 비대칭적 규제 환경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균형 있는 정책 재량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주요 연구내용

□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의 통상 환경 진단 및 대응 방향 모색이 필요

○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과 중국의 구조적 대응이 맞물리며, 세계 통상 질서가 미·중 중심의 분절적 구조로 재편되는 양상

○ 이러한 미·중 경쟁 구도와 2026년 5월 정상회담 결과는 갈등 해결이 아닌 갈등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할 분석 틀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안보 민감도(핵심 vs. 간접 경제안보)와 거래 가능성(차단·통제 vs. 거래·완화)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 분석 틀을 통해 미·중 충돌 영역을 4개 국면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담 결과와 향후 전개를 전망

□ 한국은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델 설계 필요

- 2025년 11월 경주 APEC 및 2026년 1월 베이징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간 협력 재건의 모멘텀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한·중 협력 패러다임의 정립을 모색

- 특히 '투자의 미국, 소비의 중국'이라는 비대칭 구조를 활용하여, 안보 민감도를 기준으로 통제·관리 영역과 실질적 확대 영역을 구분하는 전략을 제시

□ 본 연구는 향후 미·중 경쟁 구도를 전망하고,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대외 관계 수립을 위한 분석 자료를 제공

○ 미·중 전략경쟁 전개상황을 전망하여, 향후 한국의 국제통상 환경을 가늠할 수 있음

- 중국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제15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중국의 대응 전략을 고려한 분석 제공

○ 실효성 있는 한·중 협력 모델의 정책적 제언을 통해 통상 당국의 정책 수립에 기여

-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도 안보영역에서 한·중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모색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장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과 미·중 전략경쟁 전개를 살펴보고, 3장에서 이에 대응한 중국의 국가전략을 분야별로 분석, 4장에서 위 분석 틀에 기초해 정상회담 결과를 해석한 뒤, 5장에서 안보 민감도에 따른 한·중 협력 모델을 제시함

II.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

1. 트럼프 2기 대중 무역정책 특징: 미국의 대중국 관세구조 및 수출통제

□ [대중국 관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불균형은 자유무역이 아닌 비시장경제 구조의 불공정 무역의 결과라는 인식 하에 중국에 대한 다층적 상호 관세를 부과

○ 관세를 협상을 위한 다층적 레버리지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유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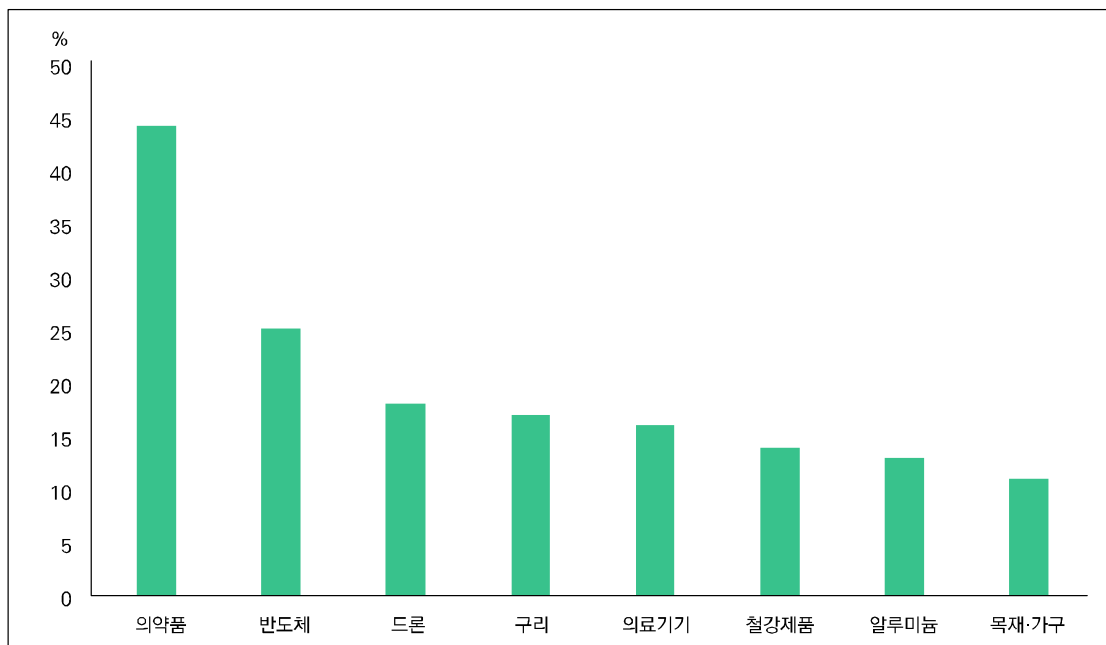
- Layer 1(301조 및 232조): 상시적이고 품목별로 부과되는 핼셋 고관세
- Layer 2(Fentanyl/IEEPA): 전 품목에 기본 10% 부과
- Layer 3(Reciprocal/상호관세): 전 품목에 10% 부과되는 상호관세

○ 다만, 2026년 2월 20일 미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렸고 Layer 2, 3은 현재 무효화된 상태로, 301조 등으로 대체 중이며 양국의 무역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대법원 위헌 판결로 대중국 실효관세율이 36.8%에서 21.3%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중국은 여타 국가에 비해 가장 큰 수혜자(Global Trade Alert, 2025)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국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 관세부과를 적용할 예정이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대법원 판결 이전수준까지 관세를 회복시킬 것으로 예상(The Wall Street Journal, 2026.6.3).
- 또한 <그림 1>에서 보듯이 중국은 미국의 잠재적 관세 부과 대상 업종에서 높은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양국 무역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그림 1> 232조 관세 잠재적 대상 품목 중 미국의 중국 수입 비중

(단위: %)



자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5.11.14)에서 분석한 232조 관세 잠재적 대상 품목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대중국 수출통제]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수출통제와 번복으로 예측 불가능성·수익성·중국의 미국기술 종속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

○ 2025년 4월 엔비디아의 중국용 저사양 H20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으나, 2025년 12월 보다 고성능인 H200에 대해 중국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수출을 허가하며 개별 심사 제도로 규제를 완화¹⁾

○ 2025년 5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의 대 중국 공급 중단 후, 7월 재허가

○ 8월에는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VEU, Validated End-User)를 중단하고 개별 허가로 변경, 이후 연간 허가제 도입

○ 이와 같은 정책 변화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주요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예측 불가능성: 정책을 수시로 번복함으로써 중국 반도체 산업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함
- 수익성: H200 반도체 수출을 수출세와 연계할 정도로 안보 규제를 재원 확보로 연결하려고 시도
- 종속성: 중국에 완전 수출통제 대신 저사양 제품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종속 유지

○ 이러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 보복이 아니라 트럼프 1기의 경험에서 학습한 구조적 대응체계로 맞서고 있어, 다음 절

에서는 그 대응의 출발점이 된 1기 무역합의부터 살펴봄

2. 중국의 구조적 대응 형성과정과 경쟁 영역의 다각화

□ 트럼프 1기 무역합의(Phase One Deal)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중국의 수입확대 약속으로 단기 봉합하는 데 그쳤으며, 이 실패의 경험이 중국의 구조적 대응 기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Bown, 2021)

○ <표 1>과 같이 당시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 축소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중국의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구매 약속을 이끌어낸 반면, 중국은 추가 관세 확대 저지를 위해 농산물·에너지 중심의 구매 확대와 금융시장 일부 개방을 수용

- 그러나 실제 이행 측면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구매 목표의 약 58%만 달성하고 구조적 개혁을 회피하면서 미국 측 불만이 누적
- 관세 조치에서도 미국은 기존 25% 관세를 유지한 채 추가 관세만 일부 유예하고 중국은 보복 관세 일부를 철회하는 데 그쳐, 양국 간 근본적 갈등 해소 없이 표면적 합의에 머무른 한계가 드러남

○ 트럼프 1기 미·중 무역분쟁으로 양국 모두의 후생손실을 기록하였으며(Fajgelbaum & Khandelwal, 2022), 중국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트럼프 2기에 대비한 대응 기조를 형성

〈표 1〉 2020년 1월 미·중 무역합의(Phase One Deal)의 양국의 관점

	미국 관점	중국 관점
목표	대중 무역적자 축소, 지식재산권 보호	추가 관세 확대 저지, 협상 시간 확보
합의 내용	중국의 2년간 미국수입 2,000억 달러 추가 약속	농산물·에너지 중심 구매 확대 + 금융시장 개방 일부 수용
실제 이행	구매 목표의 약 58%만 달성 → 미국 측 불만	코로나19 핑계로 미달 정당화, 구조적 개혁은 회피
관세 조치	기존 관세 유지(25%), 추가 관세 일부 유예	보복 관세 일부 철회

자료: Bown(2021)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미국 정부의 H200 수출 승인 이후에도 국무부의 추가 안보심사로 선적이 지연되었고, 중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이유로 수입을 보류하던 중 올해 7월에 이르러 제한적 수입을 허용하고자 하나 지속적으로 미 의회의 반대에 직면

-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인해 중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하였고, 한국 등 제3국이 미국 수입시장을 대체
- 관세는 미국 수입 가격 상승과 수입업자 비용 손실로 이어졌으며, 수입산 중간재가격 상승으로 미국 제조업 고용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미국은 GDP의 약 0.10~0.17%에 해당하는 후생 손실을 기록
- 중국도 관세피해로 1인당 GDP 2.52% 감소, 고용 1.62% 감소 등으로 GDP의 약 0.29%에 해당하는 후생손실을 기록(Chor & Li, 2024)

○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은 ▲ 미국 의존도 축소, ▲ 보복관세 이외의 수단 강화, ▲ 내수 및 기술 자립을 추진하였고,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에 대한 주요 대응책으로 나타남

□ 이후 트럼프 2기에는 양국 각자의 목표와 압박 수단이 한층 고도화·다각화됨

○ <표 2>와 같이 미국은 단순한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공급망 디커플링, 첨단기술 봉쇄, 불공정 무역관행 근본 시정으로 협상 목표를 격상하고, 관세·반도체·AI 분야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등 압박 수위를 크게 끌어올림

○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과거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관세 전면전 회피와 핵심기술·산업 보호를 목표로, 희토류 수출 제한·미국 기업 규제·위안화 결제 확대 등 내수 전환과 자원 무기화를 결합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

□ 특히, 중국의 의존도 축소 노력으로 트럼프 1기 이후 최근 미·중 양국의 무역의존도 하락이 심화되어 양국이 무역분야에서 서로에게 큰 타격을 주기 어려워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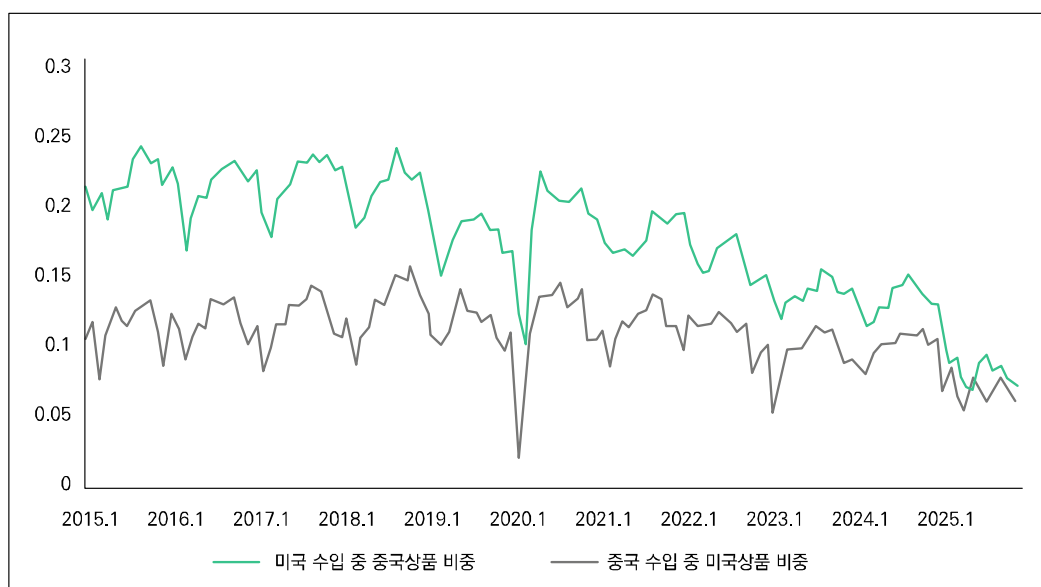
〈표 2〉 트럼프 2기 미·중 무역합의 과정의 양국의 관점

	미국 관점	중국 관점
목표	공급망 디커플링, 첨단기술 봉쇄, 무역적자 근본 해소	관세 전면전 회피, 핵심기술·산업 보호
압박 수단	관세 부과, 반도체·AI 수출통제 강화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기업 규제, 위안화 결제 확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미·중 상호 무역의존도 추이(2015~2025)

(단위: %)



자료: Bruegel Dataset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와 같이 2025년 중국의 대미수입은 2024년 대비 26% 감소(Bown, 2026a), 대미수출도 2018년 대비 40% 감소(Bown, 2026b)

- 〈그림 3〉과 같이 콩, 소고기 등 주요 농산물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의 대미국 수입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

○그 배경에는 중국의 수입다각화가 있으며, 〈그림 4〉과 같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으로 농산물 및 원자재의 수입대상국을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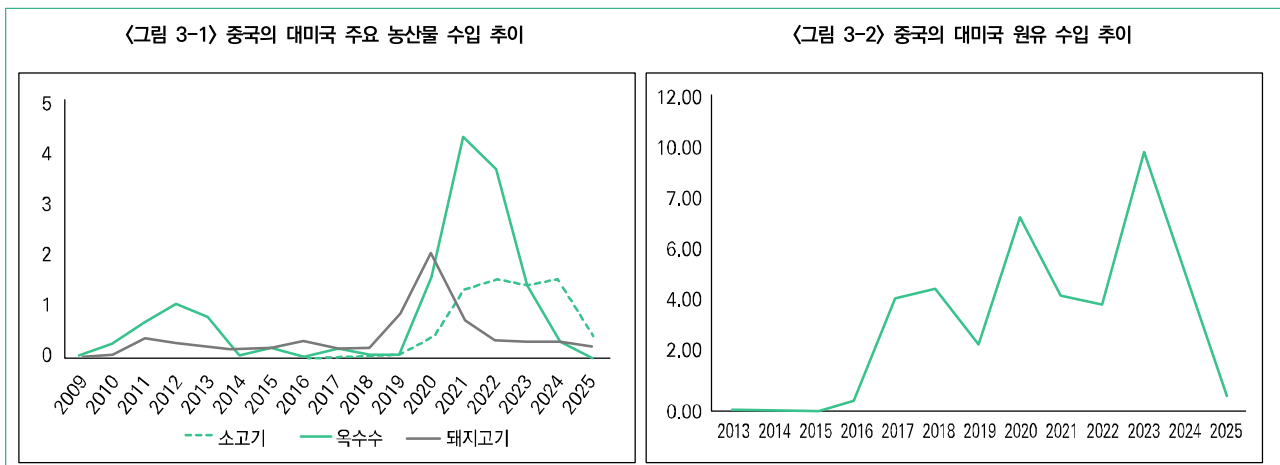
- 중국은 이란·러시아·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저가 매입, 동남아 경유 우회수입, 위안화 결제 등을 통해 중동 리스크에 대한 독자적 적응 구조를 구축

□ 나아가 이번 이란 사태는 미·중 경쟁의 영역이 무역을 넘어 금융·에너지·자원으로 다각화되는 상황을 시사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에너지 카드의 한계와 중국의 기술·자원·금융 완충력을 동시에 드러낸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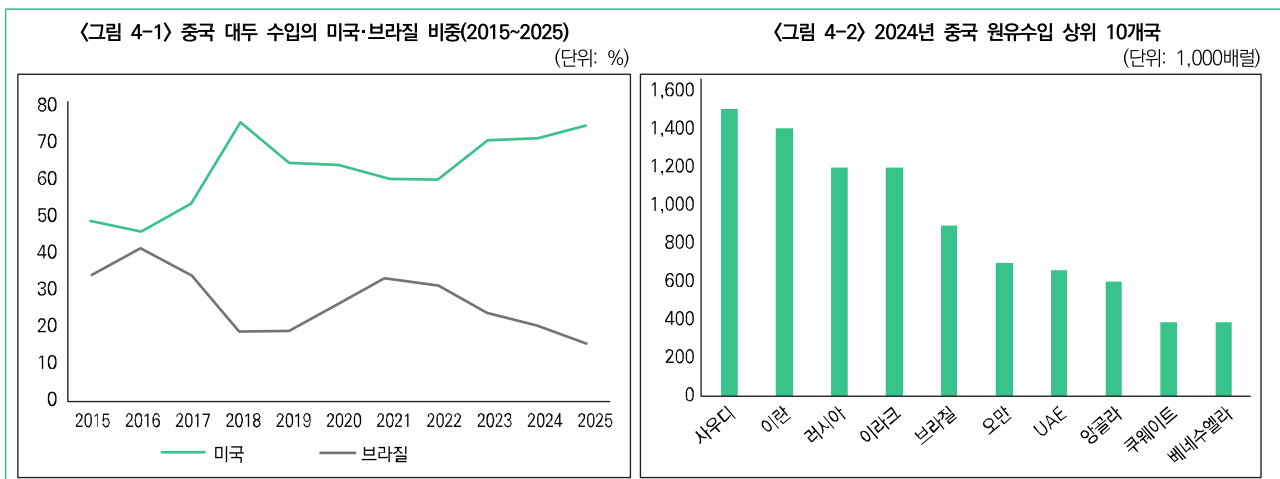
〈그림 3〉 중국의 대미국 주요 농산물 및 원자재 수입 추이(2009~2025)

(단위: 10억 달러)



자료: Bown(2026b)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 중국 농산물 및 원자재 수입다변화 추이



출처: Reuters(2026.1.28)의 그래프를 재구성

참고: 중국의 1일 원유 수입량을 의미하여, 단위는 1,000배럴
출처: Politico(2026.3)의 그래프를 재구성

-
- 미국은 중동 에너지 불안을 대중국 협상력 강화에 활용하려 했으나, 중국은 우회수입·비달러결제·재고확보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석유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구매한 정유업체와 관련 해운사 등을 제재해왔지만, 위안화 결제 등으로 제재를 우회하고 있어 실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The Wall Street Journal, 2026.5.1)
 - 중국은 위안화 국경간 결제 시스템(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위안화 결제 확대를 통해 분절적 금융질서 속 자국 중심 네트워크를 강화
- 이는 중국이 단순 원유 수입국이 아닌, 전략적 충격 관리 능력을 갖춘 행위자임을 시사
- 이처럼 미·중 경쟁이 무역을 넘어 기술·자원·금융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중국 역시 보복관세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됨.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국가전략을 정책 분야별로 살펴봄

III. 중국의 구조적 대응과 국가 전략

□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미·중 경쟁이 무역을 넘어 기술·자원·금융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중국은 보복관세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장에서 이를 분석하여 미·중 정상 회담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

- 중국의 대응은 크게 △ 기술정책, △ 산업정책, △ 통상·안보정책, △ 거시경제정책으로 구분

1. 기술정책: 신질생산력 기반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 트럼프 1기 무역 분쟁 이후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과학기술 자립자강' 명시

- 최근 등장한 신질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은 전통적인 생산 요소(노동, 자본, 토지)와 기존 기술의 단순 조합을 넘어, 첨단 기술·고급 인적자본·제도적 혁신이 통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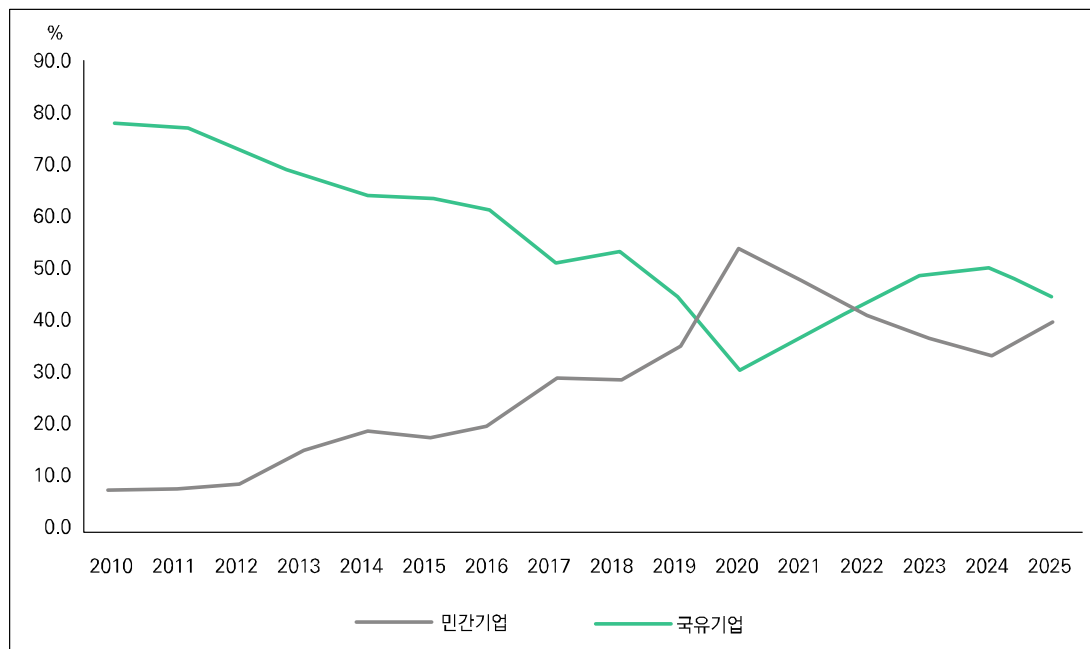
고도화된 생산 체계를 의미하며, 중국의 기술발전을 표방하는 키워드로 내세워지고 있음(2024년 양회)

□ 구체적으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포함된 기술정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핵심 기술의 자립화: 반도체, 공업용 기계, 첨단 기기 등 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자립화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함
- 첨단 과학분야 선점: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2035년까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로 육성
- 민간기업 역할 강조: 국가 프로젝트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산학연 협력체를 구성하도록 지원
- 우수 인재 육성: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의 과학기술 인재를 집중 육성

〈그림 5〉 중국 100대 상장 기업 중 소유권 별 비중(2010~2025)

(단위: %)



자료: Huang & Véron(2026)의 그래프를 재구성

□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재조명을 주목할 수 있는데, 중국 상장 100대 기업에서 민간 부문의 비중은 기술 기업들의 성장으로 2025년 40%까지 증가(Huang & Véron, 2026)

○ <그림 5>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민간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시기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음

- 이 당시의 감독강화는 민간 부문의 비대화가 국가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거시적 통제권이 미치는 범위 내로 민간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

○ 하지만 최근 AI관련 산업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자 2025년 2월, 시진핑 주석은 샤오미, 딩시크,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BYD, CATL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민간 기업들과 회담

- 이는 중국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신뢰회복과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다시 고조시키는 계기가 됨

□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과 경쟁하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그림 6>과 같이 AI 분야에서 중국은 전체 특허 수 기준으로는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파괴적 혁신(Radical novelties)을 보이는 AI기술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

- 인공지능(AI) 수용성 측면에서도 중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Ipsos, 2025), 사회 활용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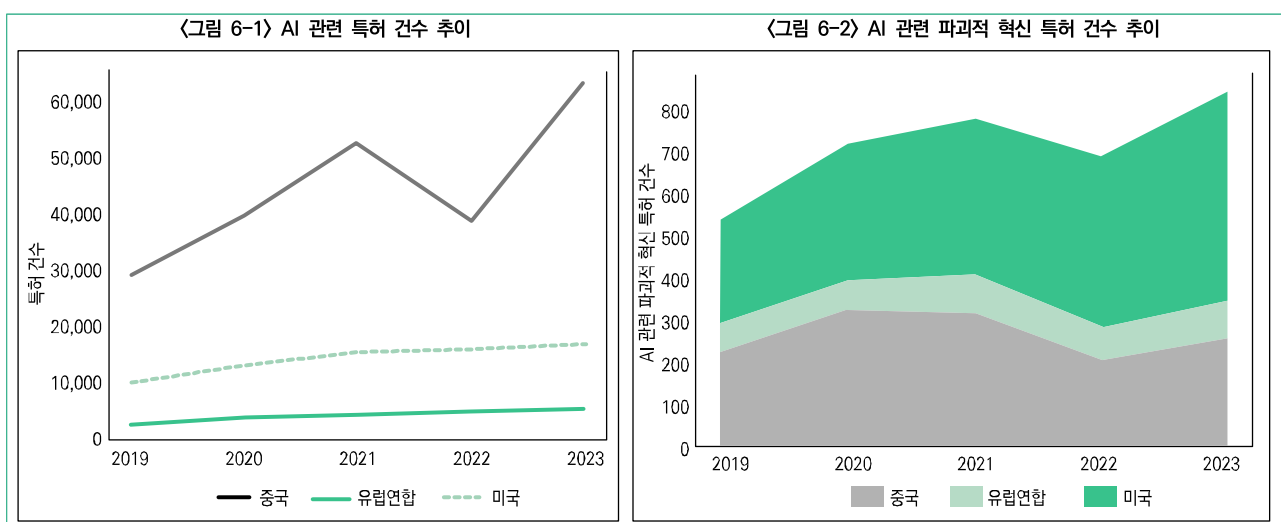
○ 중국 AI모델은 미국과 달리 개방형 모델을 채택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임

- <그림 7>과 같이 2025년 9월 알리바바의 Qwen 모델이 오픈 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시기 출시된 신규 모델의 63%를 중국계가 차지(Meinhardt et al., 2026)

-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개방형 AI 모델을 확산시키면서, 자국 내 통제형 AI 생태계와 대외 확산형 AI 전략을 병행하면서 미국의 기술우위에 대응

<그림 6> 중국·미국·EU AI 경쟁력 비교 추이

(단위: 건수)



출처: García-Herrero et al.(202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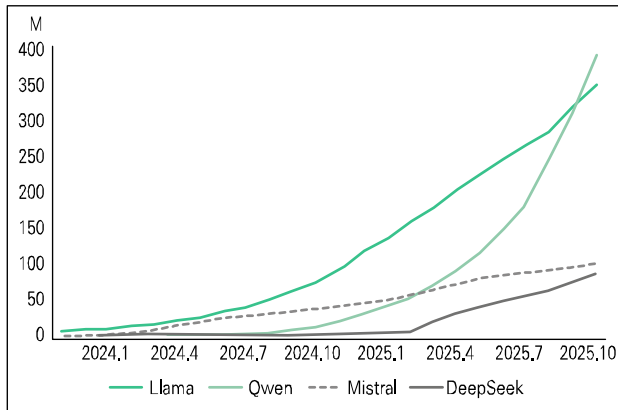
참고: '파괴적 혁신 특허'란 이전에 유사한 선행 특허가 없으며 이후 최소 5회 이상 인용된 새로운 특허를 의미함

출처: García-Herrero et al.(2025b)

〈그림 7〉 허깅페이스 국가별-모델별 다운로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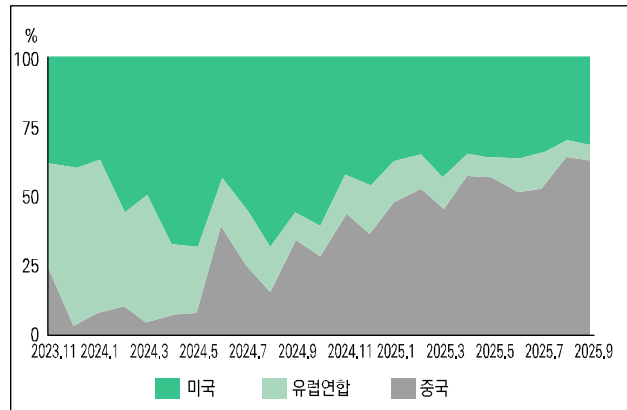
(단위: 건수, %)

〈그림 7-1〉 주요 AI 모델별 허깅페이스 다운로드 횟수 추이



출처: Meinhardt et al.(2026) 자료 재구성

〈그림 7-2〉 허깅페이스 국가별 AI 모델 비중 추이



출처: Meinhardt et al.(2026) 자료 재구성

- 이러한 기술·AI 경쟁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자원 배분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과 인프라에서 첨단기술 분야로 이동시키는 국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동안 중국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던 부동산 산업으로 투기성 자본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음
 - 2020년 도입된 '세 개의 레드라인(Three Red Lines)' 정책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엄격히 규제(자산 대비 부채비율 70% 이하 등)
- 이러한 기조와 동시에 2024년 4월, 중국정부는 부동산에 집중된 대출자금이 전략적 핵심 기술에 우선 배분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 이에 따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과학기술 대출 한도를 4,000억 위안 증액하였고, 총 1.2조 위안 규모의 기술 혁신 자금을 확대 편성
 -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공상은행(ICBC)은 2024년 신흥 산업 대출이 3.1조 위안을 돌파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23년 24.1%에서 2024년 21.5%로 하락(ICBC, 2025)
 - 특히, 2025년 5월 기준 정부운영펀드 약 80%가

전략적 신흥 산업에 투입되었으며, 이 시장에서 국유 자본 비중이 75~80%에 달할 정도로 국가지원의 역할이 크게 작용

- 자본의 재배분과 더불어, 인적 자원의 재배분을 위해 첨단 산업으로 인재를 유도하는 산업 간 임금 및 보상 구조를 개편
- 2022년 《국유 금융기업 보수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기점으로 그동안 고임금 산업으로 여겨져 온 금융권 고위 임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제한하여 금융권 전반의 임금이 삭감(Sina Finance, 2022.8.3)
- 동시에 고등교육의 전환으로 산업요구에 맞는 연구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실시(Ministry of Education, 2023.3.21).
 - 대표적인 과학기술 대학인 하얼빈공업대학의 경우, 2021년 이후 5년간 예산이 109.3% 급증하여 주요 대학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
 - 반면, 중국 명문대 지표인 '쑹일류대학' 소속 147개 대학 중 2025년에 예산이 감소한 16개 대학은 대부분 인문사회계열 중심으로, 이공계열로 정부예산 집중도가 심화

2. 산업정책: 제15차 5개년 계획 기조 하의 교역국 다변화 및 공급망 정책

□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 기조 아래에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교역·에너지·산업 전반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동시에 과잉생산 등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질적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 이번 절에서는 중국의 산업정책을 교역국 다변화, 녹색전력망 구축, 지방정부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 등 추진 양상과 성과를 살펴본 뒤, 이로 인한 과잉생산 문제와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차례로 검토

□ (교역)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교역국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수출입 시장을 다변화할 것을 명시하여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있음

-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대외정책인 일대일로 관련 물리적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이러한 외형적 기반뿐만 아니라 제도적·인적 영역에서도 국가표준 일치 및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2026년 5월 1일부터 수교 중인 아프리카 53개국의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Caixin Global., 2026)

□ (에너지)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 해소 노력은 에너지 영역으로도 확장되며, 녹색전력망 구축과 석유 수요 구조 전환 등 에너지 안보 기반 강화를 추진

○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녹색전력망 구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청정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 안보 리스크를 완화하기 때문

- 2024년 중국의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 규모와 청정에너지 특허 출원 비중은 각각 31%, 75%를 차지하고 있음(Yang et al., 2025)

- 전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온 석탄발전 비중은 2015년 72%에서 2025년 59.8%로 하락 추세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5년 35.5%를 차지

- 발전 설비용량 측면에서 2025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58.8%에 달하지만, 높은 발전 변동성으로 인해 실제 가동률이 낮고, 이에 따라 석탄발전이 유연·조절 전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력 운용 체계가 전환되는 추세(International Energy Research Institute, 2026)

○ 중국의 전체 석유 수요는 2025년 이후 감소할 전망이며, 운송용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석유 화학 수요는 증가할 전망

- 운송부문 수요감소는 전기자동차, LNG트럭, 고속 철도 발전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IEA, 2025)

- 이란 사태로 원유 부족사태에 직면한다면 운송부문보다는 석유화학의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산업) 중국의 산업정책의 주요 발전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산업육성과 중앙정부의 대규모 기금 투입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기차·반도체 등 핵심 산업이 성장(Xinhua, 2023)

○ 중국에서 지방정부 자본은 위험도가 큰 신흥 산업에 직접 투자되고, 향후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국유 자본은 점진적으로 회수되는 방식으로 전략산업을 육성

○ 지방 정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안후이성 허페이시의 '허페이 모델(Hefei model)'이 대표적임

- 허페이는 지난 10년 동안 전략적 신흥 산업에 1,600억 위안 이상의 국유 자본을 투입하여 600억 위안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총 6,200억 위안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도

- 예컨대, 디스플레이 회사인 BOE에 허페이는

2008년에 35억 달러를 투자한 결과, 현재 세계 스마트폰·노트북 패널의 약 1/3을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로 성장하여,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견인

○ 이는 지방정부가 직접 벤처캐피탈 역할을 하면서 첨단 신흥산업(반도체, EV, AI 칩 등) 생태계를 키운다는 특징을 가지며,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구축

-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더 이상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수준에 도달(Williams, 2026)

-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인 BYD는 강력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 배터리 등 부품의 약 80%를 자체 생산하며 거래비용을 낮추는 반면, 테슬라는 자체 생산비중이 37% 수준

- 또한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R&D 및 관리 부서를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내에 집중되어 규모의 경제와 낮은 간접비를 누릴 수 있음

○ 반도체 산업 역시 오랜 기간의 국가기금 투입을 통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국가 집적회로 산업 투자기금'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왔으며, 1기 1,387억 위안, 2기 2,041억 위안에 이어 2024년에는 약 3,440억 위안(약 475억 달러) 규모의 3기 기금을 출범(Fortune 2024.5.28)

-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미국 제재로 첨단 노광장비(EUV, Extreme Ultraviolet)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7나노 이하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으며, 낮은 수율에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꾸준히 생산을 이어가고 있음(조선일보, 2025.9.25)

-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허페이 모델의 수혜기업인 창신메모리(CXMT)가 상하이 증시 상장을 통해 약 295억 위안(약 42억 달러)을 조달해 생산라인과 기술 고도화에 투입할 계획(조선일보 2026.6.11)

-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2026년 1~2월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4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73% 증가(SCMP, 2026. 3. 10)

- 다만 한국 기업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첨단 고대역폭 메모리(HBM) 영역에서는 EUV 부재 등으로 여전히 뚜렷한 격차가 있지만, DDR5 등 범용 메모리 기술력은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

□ (한계 ①) 하지만, 중국의 산업정책의 주요한 발전 방식인 지방 간 중복투자는 과잉생산과 내권(과잉경쟁) 문제를 일으키며 최근 중국정부의 관리대상이 됨(Zhao et al., 2025)

○ 이처럼 중국 중앙정부는 과거 정책적 핵심 산업에 대해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전 방식을 채택

-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토지 매각 수익이 급감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제조업 부가가치세 확보에 주목하여 중복투자와 과잉생산이 더욱 심화

- 아울러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되면서, 자원 확보를 노린 지방정부들이 해당 제조업 분야에 무차별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공급 과잉 현상이 더욱 증폭

- 이는 최근 내수시장 및 국내소비 침체와 맞물려서 공급측면의 과잉생산 및 '내권(과잉경쟁)'이 심화되고, 밀어내기 수출로 미국의 보조금 철폐 및 공정 경쟁 요구에 직면하게 됨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기조는 유지하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

- 단기적 대책: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규제하고, 한계기업(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퇴출을 본격화

- 장기적 대책: 지방 보호주의와 시장 분할(장벽)을 타파하고, 국가 전역을 하나로 묶는 '전국통일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해소하고자 함

□ (한계 ②) 이러한 중국의 질적 성장 및 과학기술 고도화 전략이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신·구 산업 간의 성장 시차(Time Lag): 2023~2025년 기간 동안 전통 산업의 생산 감소 규모는 신산업 성장 규모의 약 6배에 달해, 신산업이 전통 산업의 공백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음(Tian et al., 2026).

- 동 기간 전통 산업(부동산, 내연기관 자동차, 인프라 등)의 GDP 비중이 23%에서 17%로 급감한 반면, 신산업의 비중은 5.5%에서 6.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침

○ ‘중국 경제의 역설(China’s Economic Paradox)’ 심화(Ang, 2024): 첨단 신산업 중심의 성장이 기존 전통 산업의 쇠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저시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 공백이 발생

- 전통 제조업의 침체와 공급 과잉에 따른 한계기업의 양산은 청년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으며, 이는 고용의 질이 낮은 킥 이코노미(Gig Economy)로의 취업 쏠림 현상으로 이어짐.

- 반면, 기술 발전의 과실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과 과학기술 엘리트에 집중되고 대다수 중산층과 청년층이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용 구조 악화와 소득 불평등은 ‘내수 소비 부진 → 디플레이션 압력 심화 →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구조적 악순환을 형성

- 그럼에도, 단기성장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로 올해 성장목표치는 작년 5% 내외에서 4.5~5%로 하향조정

○ 중앙집중식 데이터 통제 및 규제 불투명성: 이는 CPTPP, DEPA 등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체계로의 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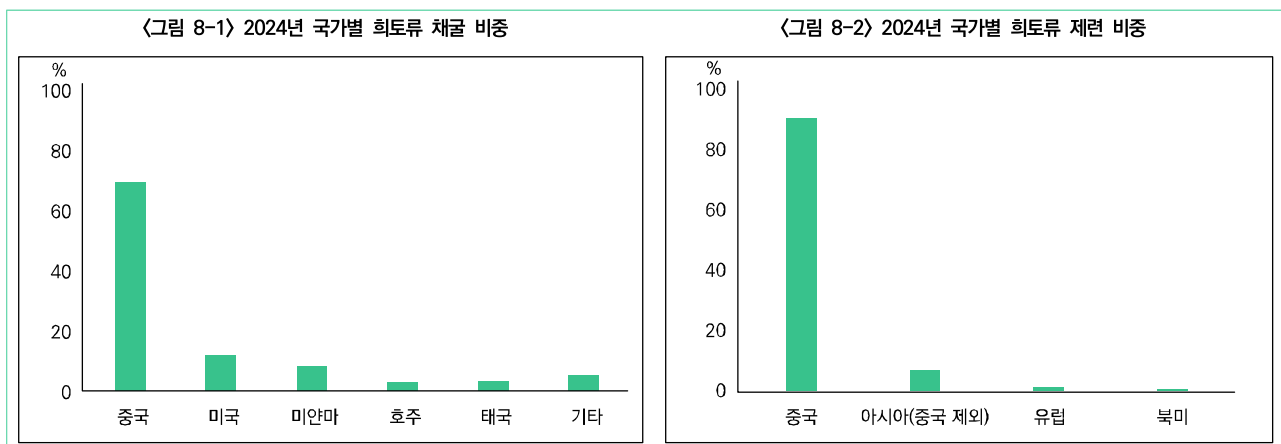
- 향후 중국 정부는 과거의 독점적인 전략적 사령관(Strategic commander) 역할에서 탈피하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투명한 규제 체계 확립을 보장함으로써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개방적 형태의 진화적 민관 파트너십(Evolutionary state-private partnership)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Shin & Choi, 2025).

3. 통상·안보정책: 수출통제 강화 및 제재 수단의 다각화

□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주요 자원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제재 수단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본격화

〈그림 8〉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시장 비중

(단위: %)



출처: Government of Canada.(2026) 자료 재구성

○ 제15차 5개년 계획에 희토류 및 희귀금속 등 핵심 자원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경쟁 우위 강화를 공식 명시

- 수출 통제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에 맞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제재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시사
- <그림 8>과 같이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채굴의 69%, 제련의 90%를 차지하며 희토류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어 미국 첨단 제조업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체 가능성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2025년 4월 4일에 중희토류 7종 수출통제를 발동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0월 9일에는 중국이 역외관할권을 적용하였으나, 2025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유예를 발표

- 역외관할권이란,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제품 가치 기준 0.1% 이상)포함된 제품이나, 중국의 희토류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까지도 제3국 수출 시 중국 정부 승인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며,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더욱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음을 시사
- 특히, 희토류 중 디스프로슘은 미사일, 잠수함 등 미국 국방 무기의 핵심 부품이지만, 중국에서 99%가 제련되고 있어 미국 첨단 무기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반면, 미국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기업 USA Rare Earths는 2025년 디스프로슘 샘플을 처음 생산했으나,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Baskaran and Schwartz, 2025)

□ 자원 무기화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위안화 국경간 결제 시스템인 CIPS 확대를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Baker, 2025)

○ 2015년 출범한 CIPS는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으로, 금융기관 간 직접결제를 지원

-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는 러시아, 이란 등과의 위안화 결제가 확대되면서 영향력 확대

○ 2025년 5월 기준 참여 기관 수 1,683개(전년 대비 +10%)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지역 편중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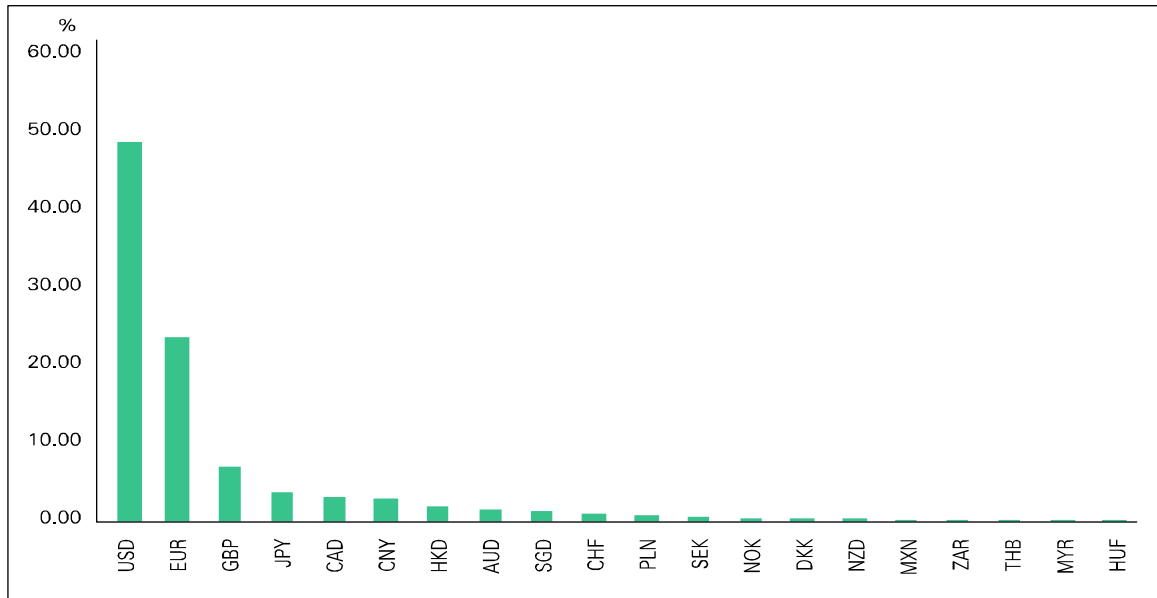
- 참여기관은 아시아 73%, 유럽 17%에 집중되어 있지만, 아프리카(4%), 북미(2%) 등은 미미한 상황
- 2025년 6월, 중동·아프리카 소재 6개 외국 은행과 최초로 직접 파트너십 체결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하지만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임

- SWIFT는 235개국 11,500개 이상 기관을 연결하는 범용 네트워크인 반면, CIPS는 위안화 결제·청산에 특화
- CIPS는 상당 부분의 거래에서 SWIFT에 의존하기 때문에, 2025년 3월 SWIFT와 MOU를 체결할 정도로 아직은 경쟁보다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 2025년 6월 기준 위안화의 글로벌 SWIFT 결제 비중은 2.89%에 불과(달러 48.4%, 유로 23.5%)

〈그림 9〉 2025년 6월 기준 통화별 무역금융 시장 점유율

(단위: %)



자료: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2025)의 자료를 재구성

□ 중국은 국제통상 환경의 현상유지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면서 통상·안보정책에서 실질적인 분절 질서를 활용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

○ 중국은 WTO식 자유무역 질서 복원보다 현재의 분절된 질서가 자국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미국 주도의 글로벌 디커플링·블록화는 단기적으로 중국에 위협요소로 작용하나, 글로벌 사우스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
- 분절된 글로벌 질서 속에서 첨단기술, 위안화 국제화 등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자국 공급망·금융망으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통상정책을 활용

○ 중국은 명목적으로는 글로벌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동시에, 실질적 분절 질서 활용이라는 양면적 전략을 구사

- 대외적으로는 WTO·다자무역 규범 수호를 천명하면서 CPTPP, DEPA 등 국제질서에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반면, 대내적으로는 분절된 질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BRICS, 일대일로 등 자국 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

4. 거시경제정책: 내수 주도형 ‘쌍순환(Dual Circulation)’ 구조로의 전환

□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중국은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키우는 ‘쌍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6년 GDP성장 목표를 4.5~5%로 제시하며 2025년 5%보다 하향조정함

○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첨단 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핵심 동력으로 강조

-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내수 중심의 자립 경제를 구축하고, 동시에 국제 무역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국의 핵심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 그러나 고용 불안과 가계 소득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각종 소비 진작책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GDP 목표치 하향은 트럼프 2기 관세 충격과 내수 부진을 반영한 현실적인 목표로 해석할 수 있음
 - 고성장보다 질적 성장·안정적 고용유지에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
 - 이는 성장을 달성보다 실업을 관리 등 사회 안정이 실질적 정책 목표로 부상한 것을 의미
- 이러한 정책목표에 따라 물적자원 투자에서 인적자원 투자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내수 주도형 ‘쌍순환’ 구조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 이번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기존 인프라·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의료·교육·연금·실업보험 확충으로 정책 전환 기조가 확연히 드러남
 - 사회 안전망 강화하여, 예비적 저축 감소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
 - 이를 위해 농촌·이주 노동자 대상 의료보험 적용 확대하고, 출산·육아 지원 강화
 - 이는 첨단 산업의 성장과 내수 침체가 공존하는 ‘중국 경제의 역설’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
 - 기존의 정책이 일시적인 지출 촉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여력 확충으로 그 기조가 전환
 - 전통 산업 종사자를 포함한 다수 국민의 사회보장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
- 종합하면, 이와 같은 중국의 기술, 산업, 통상·안보, 거시경제의 대응은 ‘대외 의존도 축소와 자립역량 강화’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
 - 기술정책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산업정책의 공급망 다변화, 통상·안보정책의 자원 무기화와 위안화 국제화, 거시경제정책의 내수 중심 쌍순환 전환 등은 모두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을

강화

- 다만 이러한 전략은 과잉생산·내수 부진 등 내부모순을 동반하고 있어, 그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 이렇게 구축된 대응 역량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분야별로 각기 다른 카드로 활용되며, 이를 토대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대응체계는 트럼프 1기의 학습을 거쳐 구조화된 것이어서 단기 협상 압박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중국이 각 분야의 기조를 유지한 채 회담에 임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함

IV. 미·중 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다층적 경쟁 국면 전망

- 앞서 2장에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과 양국의 충돌영역을, 3장에서 이에 대응한 중국의 국가전략을 각각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해석하고 향후 미·중 경쟁 국면을 전망

1. 분석의 틀과 미·중 충돌 영역별 전망

- [분석 틀] 앞서 살펴본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과 중국의 대응을 종합하면, 양국의 충돌 양상은 안보 민감도(핵심 vs. 간접 경제안보)와 거래 가능성(차단·통제 vs. 거래·완화)이라는 두 축으로 수렴되며, 이 틀을 기준으로 이번 회담 결과와 향후 전망을 분석
- (안보 민감도 축) 동일한 대중 압박도 안보 민감도에 따라 구분: 2장에서처럼 대중관세가 철강·의약 등 전통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수출통제는 첨단기술을 직접 겨냥
- (거래 가능성 축) 같은 민감도 안에서도 미국은 전면 차단과 조건부 거래를 구분: 고민감 영역인 AI반도체에서도 저사양 H20는 금지하되 고사양 H200은 매출 25% 납부를 조건으로 허가한 사례는 안보 영역에서 관리 가능한 거래가

성립함을 시사

- 두 축을 교차하면 <표 3>와 같이 4개 국면이 도출되며, 각 국면에서 미국의 정책수단과 3장에서 살펴본 중국의 대응이 서로 연결됨
-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 핵심 경제안보 & 차단·통제]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양국이 타협 불가로 간주하는 영역
 - 군민겸용 첨단 AI·GPU, 양자기술, EUV 장비, 자율주행, 로봇과 방산 전용 통신·정보·우주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포괄됨
 - 미국은 수출금지, VEU 규제, 투자심사 강화를 고강도로 유지하며, 다른 경제적 이익과 맞바꾸는 거래(Trade-off)가 성립하지 않는 영역
 - 차세대 제조업 패권을 위해 미국은 중국산 로봇과 부품을 정부 조달에서 원천 배제하는 로봇안보법을 발의하는 등 통제영역을 확장
 - 더 나아가 미국은 한·일·대만 등 우호 파트너에 공조 압박과 현지화 요구를 병행할 것이며, 이는 한국 기업의 이중 규제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이 영역에서 중국의 대응은 3장에서 살펴본 과학기술 자립자강으로,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희토류 등 핵심광물 통제를 맞대응 수단으로 미국의 일방적 우위를 저지

<표 3> 미·중 충돌 영역 4분면 분석

	미국의 대중 정책 방향	
	차단/ 통제(Decoupling / De-risking)	거래/ 완화(Deal / Managed Trade)
핵심 경제안보	① 경제안보 & 차단·통제 → 디커플링·고강도 통제 영역 ■ 산업특징: Dual Use 및 기술안보 패권 경쟁 산업 - 군민겸용 첨단AI·GPU, 양자, 장비, EUV 등 → 자율주행, 로봇 등 - 방산전용 선박, 항공, 정보 드론, 위성, 암호, 통신 인프라 장비 등 ■ 정책수단 - 수출금지, 통제, VEU, 투자심사 강화 - 동맹국(한·일·대만) 공조 → 한·일 vs. 미 현지화	② 경제안보 영역 & 거래·완화 → 관리 하의 거래 영역 ■ 산업특징: 美中の 기술우위 산업 중 관리 가능 산업 - 최대 H200/H20 등 → 데이터센터, IT장비 등 → 스마트폰 등 소비자 - 디지털·서비스 콘텐츠IP 등 관리체계 마련(예: 틱톡 사례) ■ 정책수단 - 수출 허용 단가 관세·투자 규제 → 엔비디아, 애플 등 - 지배구조·데이터·자본을 미국화 조건부 허용
간접 경제안보	③ 저민감 & 국내외 경쟁 → 경제·산업구조 조정 영역 ■ 산업특징: 국내 인프라 관련 제조 산업 및 제3국 경쟁 산업 - 철강, 알루미늄, 의약, 차, 배터리, 조선(LNG선박), 원전(SMR) 등 - 원산지, 인허가, 인증, 운영 해운·항만·물류 등 관련 ■ 정책수단 - 고율 관세, 수수료 등 → 중국의 가격경쟁력·시장점유율 ↓ - 비핵심 경제안보이나 대중 공급망 취약성 해결 및 재편 - 중국의 비시장경제적·과잉설비·덤핑 구조" 겨냥	④ 비안보·수출확대 & 거래·완화 → 대중 수출·거래 영역 ■ 산업특징: 미국의 대중국 가격 및 공급우위 제품 - 농산물, LNG, 에너지 등 → 스마트폰 등 소비자(관세유예 대상) ■ 정책수단 - 대중 관세인하로 트럼프 17기 deal 품목 리스트 및 추가 - 미 농산물, LNG·에너지 등 -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 등 일부 관세유예 - 관광·유학생, 비자 완화 등 비안보 문화교류 확대 등

자료: 저자 작성

○ [② 관리 하의 거래: 핵심 경제안보 & 거래·완화] 핵심 안보 영역이지만 미국이 확실한 기술 우위를 점해 제한적 거래가 허용되는 영역

- H200/H20급 반도체, IT 장비, 스마트폰 등 일부 소비재, 디지털·서비스 콘텐츠 IP가 해당하며, 엔비디아·애플 등의 대중 사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미국에 대한 기술의존도 심화를 우려한 중국정부도, 단기 조달 필요성과 장기 자립 목표 사이에서 제한적 거래를 고려

○ [③ 경제·산업구조 조정: 간접 경제안보 & 차단·통제] 안보 민감도는 낮으나 미국 제조업 기반 재건과 공급망 취약점 해결을 동시에 겨냥해 압박이 가해지는 영역

- 철강·알루미늄·의약·자동차·배터리·조선(LNG선박)·원전(SMR, 소형모듈원자로) 등 전통 제조업과 핵심광물·해운·항만·물류 인프라가 포괄되며, 미국은 과잉설비·덤핑 구조를 겨냥해 고율 관세·수수료와 인허가·원산지 규제를 다층적으로 부과할 것임
- 이 영역에서 중국의 대응은 3장 산업정책에서 살펴본 공급망 다변화와 과잉생산 억제로, 중국의 자립 시도에 따라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

○ [④ 대중 수출·거래: 간접 경제안보 & 거래·완화] 안보 민감도가 낮고 미국의 가격·공급 우위가 명확해 거래가 가장 활발한 완충지대(Buffer Zone)

- 농산물·LNG·에너지 등 미국 비교우위 품목, 스마트폰·컴퓨터·가전 등 관세 유예 대상 소비재, 관광·유학생·비자 완화 등 비안보 문화교류를 포괄
- 이 영역에서 중국은 브라질산 대두·중동·러시아산 에너지로 수입선을 대체할 기반을 갖춘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협상 대가로 수용하는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음

○ [양국의 입장] 이러한 4분면 위에서 양국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회담에 임함

- 중국은 각 정책 분야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대미

수입확대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여력이 충분하나, 내수 부진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무역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입장을 견지

- 미국은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비민감 분야에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실용적 태도를 보임.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대등한 경쟁자(near-peers)'로 평가하면서도 비민감 분야의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 유지를 표방하여(The White House, 2025), 향후 합의도 [④ 대중 수출·거래] 영역을 중심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음

□ [종합 전망] 이상의 4분면 구조는 향후 미·중 관계가 분절적 디커플링(Segmented Decoupling)으로 정착될 가능성을 시사

○ 핵심 안보 영역의 통제·압박 강화와 비민감 영역의 실용적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는 칸막이형 구조가 정착되며, 어느 한 영역의 합의가 다른 분면의 타협으로 연결되지 않는 비연계적(Decoupled) 협상 양식이 표준화될 것

○ 결과적으로 영역 간 충격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영역별 갈등 관리 비용은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영역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를 의미

2. 2026년 5월 미·중 정상회담 결과 분석

□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은 <표 4>과 같이 ▲ 희토류·핵심광물, ▲ 첨단산업 기술패권, ▲ 무역·수출통제, ▲ 시장접근·구매패키지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역별 합의 수준은 안보 민감도에 따라 뚜렷한 편차를 나타냄(The White House, 2026)

○ 핵심 경제안보 영역(희토류·핵심광물, 첨단산업 기술패권)에서는 원론적·부분적 논의에 그쳐,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에서의 거래 제약이 재확인됨

- 양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상류(Upstream)이자 핵심 취약점(Choke point)을 겨냥하는 자원·기술 영역에서는 정상회담이 원론적 선언이나 입장 확인 수준에 머무름

- 특히 희토류 분야는 미국이 단기 대체 가능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협상 불균형이 지속될 전망

- 기술패권 분야는 엔비디아 CEO의 정상회담 동행에도 심층 논의가 부재했던 점에서, 국가안보 직결 영역의 경제적 교환(Trade-off) 불가능이 재확인됨

- 다만, 인공지능(AI) 분야 양국이 정부 간 대화 채널 신설에 합의하여 진전을 보임. 하지만 이는 상호 기술 통제의 완화가 아닌, AI 개발·거버넌스 분야에서 기술적·제도적 안전 기준을 만드는 안전장치(AI safeguards)를 위한 것으로, 핵심 경제안보 영역에서의 타협과 다름(Krueger, 2026)

○ 반면, 비민감 영역에서는 일부 실용적 합의를 도출하여 양국이 타협점을 모색함으로써, [④ 대중 수출·거래]의 완충지대 역할이 확인됨

- 무역·수출통제 영역에서는 무역위원회 신설이라는 제도적 협의 채널 확보로 일회성 합의에서 상시적 논의 메커니즘으로 이행하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 시장접근 영역에서는 농산물 연 170억 달러,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등 구체적 미니딜 성과가 도출됨.

-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정치적 명분과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기반 위에서의 카드 활용 가능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처럼 이번 회담의 쟁점은 4분면 위에서 양국간에 쏠리는 양상을 보임

○ 회담 성과가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에서의 원론적 선언과 [④ 대중 수출·거래]에서의 미니딜의 두 극단에 양극화되어, 고민감 영역에서는 원론적 선언과 입장 확인에 그쳐 통제 기조만 재확인되고, 저민감 영역에서는 농산물·보잉 등 구체적 미니딜이 성사되어 거래가 실제로 작동

○ 반면 [② 관리 하의 거래], [③ 경제·산업구조 조정]에서는 실질적 진전이 부재하여, 무역·수출 통제는 무역위원회 신설로 제도적 단초만 마련되었을 뿐, 반도체 등 핵심 현안의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③ 경제·산업구조 조정]은 정상회담 의제에도 오르지 못함

○ 결국 이번 회담은 '고민감 영역의 통제 확인'과 '저민감 영역의 거래 성사'라는 양극에서만 작동

□ 또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통상 영역을 넘어 안보·지정학적 의제까지 포괄하였으며, 갈등의 해결이 아닌 관리로의 패러다임 확립을 시사함

○ 통상 의제와 안보·지정학 리스크의 결합이 심화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시화됨

- 이번 회담은 관세·통상 조율에 그치지 않고 양안 문제 관리, 이란사태 등 민감한 안보·지정학적 리스크의 통제에도 상당한 비중을 둠

- 통상이 지정학·군사안보와 밀접히 결합됨에 따라, 향후 유사시 무역·경제 제재가 정당화·가속화될 수 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구조화

○ 핵심 경제안보 영역에서 성과가 부재한 근본 원인은, 중국이 3장에서 살펴본 구조적 대응 기조를 회담 국면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며 양보하지 않은 데 있음

- 중국은 희토류·핵심광물 통제와 기술 자립 기조를 협상 카드로 보유한 채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미국 역시 수출통제·기술 봉쇄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고민감 영역에서는 양측 모두 핵심 입장을 고수하는 교착이 형성됨

- 그 결과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 영역의 합의는 원론적 선언에 머물렀으며, 실질적 타결은 양국의 입장 변경 없이도 수용 가능한 [④ 대중 수출·거래]에 국한됨

○ 이처럼 관리 중심의 협상 패러다임이 정착되며, 근본적 난제 해결보다는 갈등 통제와 실리적 미니딜에 초점

- 양국 정상은 대만, 첨단 기술 패권, AI 등 구조적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둬
 - 결과적으로 무역 현안과 첨단기술, 대만, AI 등 양국 간 근본적 갈등 요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진전은 부재하였음
 - 다만 미국이 기술 통제 및 에너지 공급망 카드를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비민감 영역에서 중국의 농산물·에너지 수입 확대 양보를 견인한 점은, 향후 양국 협상 패턴의 전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시사
 - 하지만, 트럼프 1기 당시 Phase One Deal의 합의 사항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행여부가 또한 새로운 갈등의 시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누구도 우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회담으로 갈등 관리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는 타협이 아니라 충돌 회피로 역설적으로 충돌 영역은 확장될 것으로 전망
- 이란 사태(호르무즈 해협 등)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결국 어느 쪽도 결정적 우위에 있지 않음을 드러낸 회담으로, 양측의 초점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관리에 맞춰지게 되었음

- 역설적으로 이는, 만약 이란 사태 해결 등으로 어느 한쪽이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 그 시점에 협상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함. 현재의 균형은 안정적 합의가 아니라 우위 부재에서 비롯된 잠정적 상태이기 때문
- 또한 갈등 관리의 상호 민감 영역에서 각자의 핵심이익을 지키는 외중에도 충돌만큼은 최대한 피하겠다는 의미일 뿐, 타협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로 회담은 대만·수출통제 등 첨예한 쟁점에서 진전을 내지 못했고, 공동성명이나 포괄적 무역 합의도 없었음
- 새로 설립되는 무역위원회는 비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반도체·수출통제 등 핵심 경제안보 영역들은 협상의 진전이 미미하여 협상 분야와 양보할 수 없는 분야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있음
-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우위의 협상을 저지하고, 그동안 준비해온 국가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되어 긍정적이지만, 앞서 언급한 중국경제의 역설 등의 내부 모순해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제한적

〈표 4〉 미·중 정상회담 쟁점 및 회담결과와 평가

영역	〈표 3〉 해당 사분면	미국 입장	중국 입장	회담결과	평가
희토류·핵심광물 (Upstream choke points)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요구, 에너지 공급망 카드 활용	희토류·핵심광물 수출통제, 역외관할권 적용으로 협상력 확보	갈등해결을 위한 원론적 선언에 그침	상호 민감 영역으로 향후에도 협의 난항 예상
첨단산업 기술패권 (Tech-Hegemony)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	AI·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유지, 기술 봉쇄 기조 강화	독자적 AI 기술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	AI 정부 간 대화 채널 신설에 합의	기술 봉쇄 기조 유지, AI 분야에서 안전기준을 위한 대화 채널이 마련됨
무역·수출통제 (Export Controls)	② 관리 하의 거래, ③ 경제·산업구조 조정 영역	관세 부과, 거래제한 기업 명단 확대, 과잉생산·불공정 거래(보조금) 시정요구	보복관세 부과, 제3국 경유 우회수입과 기술 자립 시도, 과잉생산 논란 반박	무역위원회 신설, 반도체 수출통제는 엔비디아CEO 동행에도 심층 논의 부재	제도적 협의 채널 확보
시장접근·구매패키지 (Managed trade)	④ 대중 수출·거래	농산물(대두·옥수수)·LNG 등 자국산 구매 확대 요구	수입선 다변화 기반으로 협상 대가로 미국산 구매 수용	타결(미니달) 농산물 연170억 달러('26~'28), 보잉 항공기 200대 1차 구매, 미국산 소고기 시설 등록 확대	완충 지대 역할, 비민감 영역 한정 거래

주: '해당 사분면'은 〈표 3〉에서 정리한 미·중 충돌 영역을 의미

자료: The White House(2026.5.17) 및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미·중 충돌 영역별 향후 전개 및 전망

□ 앞서 <표 3>에서 제시한 4분면 전망은 정상회담 직후의 실제 전개에서도 확인되며, 영역별 경쟁과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 미국 국방부는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 신흥 기술 기업들을 추가 (U.S. Department of War, 2026.6.8.),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로봇수입 규제로 핵심 경제안보 통제영역을 확대

- 국방부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은 미국 국방부와 직접적인 조달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수 없으며, 기존 리스트는 항공우주/방산, 해운 물류, 통신 인프라 등을 주요 축으로 YMTC·CXMT·CATL 등 반도체, 배터리 기업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이번 신규 진입 기업은 19개사로 알리바바·바이두·유니트리 등 인터넷·AI·로봇 기업이 포함되며 기술 경쟁의 전선이 넓어짐

- 다만, 더 이상 미국 내 사업 운영(Operating in the US)을 하지 않는 10개 기업(화학, 건설, 컴퓨터 등)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어 미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경계선을 보여줌

- 또한, 미국 FCC는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과 다리가 넷 달린 4족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가안보 상의 이유를 들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② 관리 하의 거래] 반면 최근 양국의 협력 사례에서는 핵심 경제안보 영역에서도 가능한 거래의 수준을 명확히 보여줌

- 포드는 2026년 5월, 자회사 Ford Energy를 설립하여, 중국 CATL에서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기술을 도입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직접 생산하며 30% 투자세액공제(ITC) 자격까지도 확보(연합뉴스 2026.5.28)

- 이는 최근 미국 내 ESS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 기술이라도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되,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미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독자 법인

형태일 때에는 핵심경제안보 영역에서도 거래가 가능함을 보여줌

○ [③ 경제·산업구조 조정]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과잉생산과 관련하여, 7월 중국 상무부가 관련 입장 문건을 발표하며(Ministry of Commerce of the PRC, 2026), 대치구도가 다시 표면화됨

- 미국은 중국 과잉생산의 원인으로 보조금을 지목하는 반면, 중국은 과잉생산 규정의 개념적 성립과 보조금·흑자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미국 IRA 등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역으로 반박하고 있음

-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과잉생산은 중국의 발전 모델의 산물에 가까워, 해당 논의는 실제 협상보다 프레임링 대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타협 없이 대치 영역만 넓어질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올해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도 이러한 분석의 틀에서 예상할 수 있음

○ 9월에 미국이 이란 사태를 자국에 유리하게 마무리한다면, 미국의 협상력이 향상될 여지가 있음

- 이란 사태 마무리로 중국의 에너지 수입선(이란산 저가 원유) 한 축이 흔들리면 중국은 미국산 원유·LNG·에너지 구매를 늘릴 유인이 커지고, [④ 대중 수출·거래] 영역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하지만, 희토류 등 핵심안보영역에서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갈등관리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미국의 협상력 상승은 중국이 자원 무기화와 기술 자립을 더 가속하게 만들어 오히려 충돌 영역이 확장될 수 있음

- 결국 차기 회담 역시 [④ 대중 수출·거래]에서의 제한적 거래와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에서의 통제 지속이 병존하는, 이번 회담과 비슷한 구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V. 한·중 협력 모델

□ 이러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 의존적 상황에 놓여 있음

- 중국의 경우, 자국 내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제3국으로의 수출 활로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한국 역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미·중 경쟁 구도 속 한국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한·중 협력 모델을 구상함

1. 미·중 경쟁 구도 속 한국의 위험·기회 요인

□ [위험 요인] 미·중 경쟁 구도 속 한국기업의 이중 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관리가 필요함

- 이는 <표 3>의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에 대응하는 영역으로, 한 국가의 법령을 성실히 이행할수록 타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중 규제 구조가 상시화되고 있음
 - 미국의 규제를 준수할 경우 중국 내 리스크가 확대되며, 반대로 중국의 규제를 준수할 경우 미국의 제재 위험이 증가하는 이중 규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예컨대 최근 한화오션의 경우, 미국의 대중 제재 정책에 협력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 명단에 등재(조세일보, 2025.11.10)
 - 이 조치는 향후 1년간 유예되었지만, 한국 기업이 단일 국가의 규제만 준수하더라도 반대 진영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특히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는 미국이 동맹국

에 공조 압박과 현지화를 병행하는 영역으로, 한국의 정책 재량보다 미·중 구조적 제약이 크게 작용하는 고민감 관리 대상임

□ [기회 요인] '투자의 미국, 소비의 중국'의 비대칭성 속에서 한국의 기회를 찾아야함

- 이는 <표 3> [② 관리 하의 거래]·[④ 대중 수출·거래]의 저민감 영역에 대응하며, 최근 미국은 산업 및 제조업 투자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내수 및 소비 부양에 집중함
 -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현지 투자를 통한 생산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시장에서는 소비재·콘텐츠·서비스 등 수출 품목을 차별화하여 접근함
 - 미국의 상대적 취약점인 '소비재 공급'을 보완하고, 중국 시장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투트랙(Two-track) 포지셔닝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 기회 창출이 가능함

□ [기회 요인] 미국의 대중(對中) 기술패권 법안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음

- 이는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의 통제 강화가 역설적으로 한국에 기회로 전이되는 경우로, 미국 의회는 현재 중국 및 러시아산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입 및 조달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2026년 7월)에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주도로 추진 중
 - 해당 조치로 중국산 휴머노이드의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될 경우, 한국의 관련 기술 및 로봇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반도체, AI, 바이오, 로봇 등 핵심 기술 패권과 관련된 미국의 추가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위와 같은 위험·기회요인 분석은 한·중 협력을 안보 민감도에 따라 이원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

- <표 3>의 분석에서 한국이 통제·관리에 주력할

영역(①·③)과 실리적으로 확대할 영역(②·④)이 안보 민감도를 경계로 구분되어, 미국 중심의 균형 모델 설계와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필요

○ 한국의 산업 구조상 미·중 양국의 전면 디커플링(Decoupling)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을 제한적 협력 파트너로 지속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단, 중국 주도의 공급망·기술·표준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상황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됨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자립도 약화를 초래하므로 철저히 경계해야 함

○ 따라서 안보 민감 영역(①·③)은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동맹 축을 공고히 하되, 비안보 영역(②·④)은 비대칭 구조를 활용해 중국과 선택적·실용적 협력을 추진해야함

- 중국과는 안보와 비안보 영역을 구분하여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해야하며, 이는 앞서 제시된 '미국(투자)-중국(소비)'의 비대칭 구조를 활용하는 전략의 연장선

2. 최근 고위급 합의를 토대로 한 한·중 협력: 정상회담 MOU의 실질적 이행 및 정책 공조

□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미·중전략 경쟁 하에서의 한·중 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

○ 1차 한·중 정상회담(2025년 11월, 경주)에서 주요 MOU 체결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함

-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상 등 논의

○ 2차 한·중 정상회담(2026년 1월, 베이징)에서도 추가로 MOU 체결을 통해 협력 공간 확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1. 5)

- 사회·인구·문화 부문: 아동 복지 및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공무원 관리 등 환경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

- 산업·디지털·혁신·인프라 부문: 디지털·교통·중소기업 혁신 협력을 도모하며, '상무 협력 대화'신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소통 채널을 제도화

- 교역·지식재산 부문: 식품안전 및 수산물·동식물 검역 기준을 정비하고, 국경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역 환경을 조성

○ 경제·통상 중심의 실용적 협력 및 비민감 분야 집중 기조 정착

- 미·중 전략경쟁 리스크를 우회하기 위해 지정학적 민감도가 낮은 실용적 경제 의제에 집중하는 양상

- 그 일환으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실리적 통상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

□ 이러한 양자 정상회담의 MOU를 <표 3>의 분석에 비추어 보면, 합의가 비안보 영역(②·④)에 집중되고 안보 민감 영역(①·③)은 의도적으로 우회된 특징이 드러남

○ 양국이 체결한 MOU 대부분이 저민감 실용 의제에 편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통화스왑·경제협력 공동계획·FTA 서비스·투자, 식품안전·검역, 디지털·교통·중소기업 혁신 등은 모두 안보 민감도가 낮은 영역(②·④)에 해당하며, 양국이 충돌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완충지대에 협력을 집중

- 실버산업·아동복지·기후변화 등 사회·인구·환경 의제 역시 지정학적 마찰이 적어 합의 비용이 낮은 분야로, 비민감 영역 우선 접근 기조를 반영

○ 반면 핵심광물·첨단기술 등 안보 민감 영역(①·③)은 MOU 의제에서 사실상 배제됨

- 이는 해당 영역이 미·중 구조적 제약 아래 놓여 한국의 양자 합의만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

○ 다만 일부 MOU는 안보 민감 영역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단초를 함께 마련함

- 국경 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과 '상무 협력 대화' 신설은 향후 기술 유출 방지 및 수출통제 관련 사전협의 채널로 확장될 여지가 있어, [③ 경제·산업구조 조정]의 협력 기반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과제는 비안보 영역의 MOU 성과를 실질적 이행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미흡한 안보 민감 영역의 협의 채널을 보강하는 데 있음

- 안보 민감도를 기준으로 ▲ 안보 민감 영역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 비안보 영역의 신흥력 공간 창출로 나누어, MOU 기반 위에서 각 영역의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3. [안보 민감 영역] 전략적 민감 분야의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보 민감 영역 한·중 협력 다이어그램

□ 안보 민감 영역의 한·중 협력은 <표 3>의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와 [② 관리 하의 거래]를 가치사슬 단계와 시장 지향성의 두 축으로 세분하여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 (안보 민감 영역 한·중 협력 다이어그램) 세로축은 제품 구분, 가로축은 진출 대상 국가로 설정하여 <그림 10>과 같은 협력 유형을 도출

- 가치사슬 단계는 하류·응용(최종재)과 상류·기초·원천기술로 구분되며, 각각 미·중 충돌 영역의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와 [② 관리 하의 거래]에 대응
- 시장 지향성은 수요처에 따라 미국과 중국 내수시장으로 구분하고, 제3국 시장은 양국의 교집합으로 표현하여 신축적인 대응을 나타냄
- 이 분석 방법은 동일한 안보 민감 영역이라도 가치사슬 위치와 목표 시장에 따라 미국발 규제 노출도와 기술 유출 위험이 상이함을 반영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표 5>과 같음

○ [(A) 리스크 관리형 완제품 협력] 한·중 공동 완제품의 미국 진출 구간으로,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한 최소화 접근이 요구

- 휴머노이드 로봇·드론 등 통제 대상 완제품은 제3국 수출 시에도 미국 제재 연계 가능성이 있어 회피
- 소형 가전, 의류 등 비통제 완제품에서 중국의 원료·부품의 한국 내 실질적인 제조과정을 거친 후 한국산 완제품으로 대미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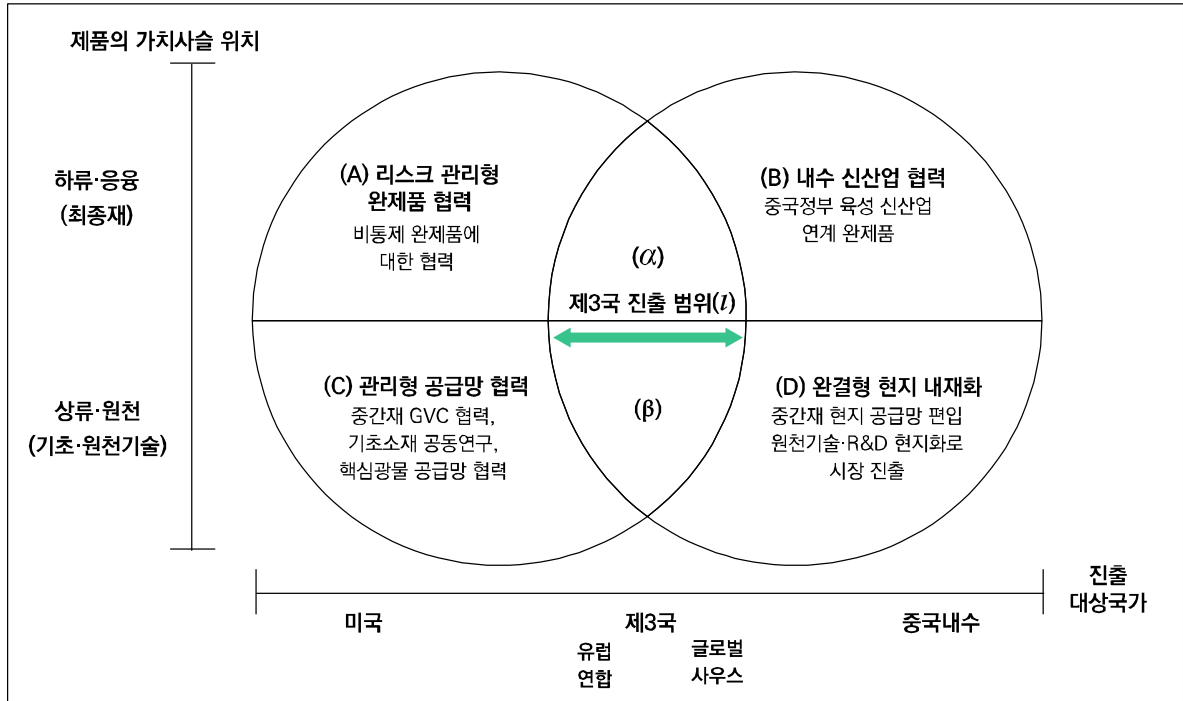
○ [(B) 내수 신산업 협력] 중국 정부 육성 정책과 직접 연계되는 내수 한정 협력 구간으로, 글로벌 공급망 진입이 적어 미국 노출이 상대적으로 낮음

- 현대자동차의 광저우 수소연료 법인 설립은 중국의 수소차 보급 목표와 연계한 선제적 시장 공략 사례에 해당함
- 중국 내수용 친환경차·전장 완제품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 필요

○ [(α) 하류 제3국 진출 영역] (A),(B) 영역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3국으로의 최종재 협력 진출이 이에 해당

- 제3국 진출범위(I)은 미·중 간 협상이 통제 강화로 기울면 축소되고, 관리 하 거래로 완화되면 확대
- 예컨대, 기아자동차가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하는 EV5, 유럽 출시용 EV2 등의 전기차에 중국 CATL 배터리를 탑재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례

〈그림 10〉 안보 민감 영역 한·중 협력 다이어그램



주: 세로축은 제품의 가치사슬 위치(하류·응용 vs. 상류·원천), 가로축은 진출 대상국(미국 vs. 중국내수)을 나타내며, 두 축의 교차로(A) 리스크 관리형 완제품 협력, (B) 내수 신산업 협력, (C) 관리형 공급망 협력, (D) 완결형 현지 내재화의 4개 영역이 도출됨. 두 원의 교집합인(α)·(β)는 각각 최종재·중간재 기반의 제3국 동반 진출 영역을 의미하며, 가로 화살표 상의 제3국 진출 범위(I)는 미·중 협상 국면에 따라 통제 강화 시 축소, 관리 하 거래 완화 시 확대되는 가변적 폭을 가짐

자료: 저자 작성

- [(C) 관리형 공급망 협력] 중간재·부품·소재 수준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공동 참여하는 구간으로, 협력 주체와 가치사슬 위치에 따라 ▲ 기업 간 중간재·부품 협력, ▲ 대학·연구기관 간 기초소재·원천기술 협력, ▲ 핵심광물·원료 조달 및 다변화의 세 갈래로 구분

- (기업 간 중간재·부품 협력) 한국 기업의 중국산 흑연·음극재를 활용한 대미국 배터리 수출²⁾
- 다만 원천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이중용도(Dual-use) 기술 구분 가이드라인과 지식재산권 보호 MOU의 실효적 가동이 전제되어야 함
- (대학·연구기관 간 기초소재·원천기술 연구) 기초과학·신소재 등 가치사슬 최상류에서 한·중 연구 협력을 진행하여,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KOSTEC)를 활용한 교류, 대학 간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설계

- (핵심광물·원료 조달 및 다변화) 한국이 상류 원료를 중국에 조달·의존하는 구간으로, 단기 공급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임
- 한국의 핵심광물 수입에서 중국은 품목 수와 규모 모두 압도적 1위이며,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니켈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6)
- 중국은 2035년 기준으로도 정제 리튬·코발트의 60% 이상, 배터리용 흑연·희토류의 80% 이상을 점할 것으로 전망되어 단기 탈중국이 매우 어려운 구조(석주현, 2025)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중 의존도가 극히 높은 품목에 대해 중국과의 수출허가 사전협의 채널을 제도화하여, 중국 내 수출통제 발동 시 사전 통보·예외 적

2) 2025년 9월 30일자로 종료된 IRA 전기차 규정에도 중국산 흑연·음극재를 사용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거래 허용 영역이었음

- 용을 논의할 수 있는 양자 채널을 확보해야 함
- [(D) 완결형 현지 내재화 원천기술·R&D를 현지화하여 중국 내수를 공략하는 구간으로, 시장 접근성은 높으나 기술 유출·중속 위험이 가장 큼
 - 삼성전자-샤오미·BYD 전장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 삼성전기-BYD 차량용 MLCC 공급계약
 - 코스맥스의 상하이 통합 연구·생산·마케팅 신사옥 준공은 현지 완결형 가치사슬 구축 사례에 해당
 - 핵심 원천기술의 본국 보유(R&D 분리)와 강제 기술이전 방지에 유의해야함
 - [(β) 상류 제3국 진출 영역](C),(D) 영역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3국에서의 한·중 공급망 상류 협력의 공간
 - 중간재 공급망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은 에코프로-거린메이(GEM) 전구체 협력 및 인도네시아 니켈 공동 진출 등이 해당
 - 한국기업 엔켐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유럽, 동남아 현지공장에 배터리 소재인 전해액을 공급하여 동반 제3국 진출 효과

- 위와 같이 한·중 협력에서 안보 민감 영역에서도 통제와 협력 분야를 구분하는 동시에, 핵심광물은 장기적으로 중국의존도 위험관리를 위해 노력해야함
- 안보 민감 영역이라 하여 협력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 위치와 시장에 따라 협력 가능한 지점은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함
 - 미·중 경쟁 상황에서도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에서 관리 가능한 구간에서는 명확한 기술 보호 장치를 전제로 협력의 실익을 취해야 함
 - <그림 10> 안보 민감 영역 한·중 협력 다이어그램과 같이 제품 생산단계와 진출 국가를 구분하여 한·중 협력공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
- 다만, 핵심광물 협력은 단기 안정 공급과 장기 중국 의존도 완화 및 공급선 다변화라는 투트랙 관리 전략 필요
 - 한국 정부는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코발트·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산업통상자원부, 2023)

〈표 5〉 최근 분야별 한·중 기업간 협력 사례

산업 분야	〈그림 10〉 영역	한국 기업	중국 파트너사	주요 협력 내용 및 전략	성과 및 목표
전기차	(α)	기아차	CATL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하는 EV5, 유럽에 출시하는 EV2 등의 전기차에 중국 CATL 배터리를 탑재	가격경쟁력 확보
패션/유통	(B)	무신사	안타스포츠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	현지 최대 스포츠웨어 기업의 인프라 활용
친환경 모빌리티		현대차	현지 기업 및 정부	광저우 수소연료 법인 설립, 수소차 시장 공략	2035년 수소차 목표에 맞춘 선제적 대응
배터리 소재	(C)	한국 배터리 3사	중국 음극재 업체	중국 흑연·음극재를 활용한 한국기업의 대미국 배터리 수출	배터리 공급망 협력
	(β)	에코프로	거린메이(GEM)	전구체 기술 공유 및 밸류체인 구축,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공동 진출	
		엔켐	CATL	한국기업 엔켐이 CATL 유럽, 동남아 현지공장에 배터리 전해액 공급	중국 해외진출 공급망 협력
전장/반도체	(D)	삼성전자	샤오미, BYD	전기차·전장·반도체 협력	공급망 파트너
전자부품		삼성전기	BYD	차량용 MLCC(적층 세라믹 콘덴서) 공급 계약	천진 법인 매출 급증 ('23 2.9조 → '24 3.3조)
뷰티(제조)		코스맥스	현지 브랜드	상하이 연구·생산·마케팅 통합 신사옥 준공(현지 완결형 모델)	현지 매출 6,000억 원 달성

자료: 언론매체 등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작성

- 다변화 완성까지의 과도기에는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되, 동시에 제3국 공급원 확보를 가속해야 함
- 주요 사례로 포스코퓨처엠은 호주 시라(Syrah)사와 모잠비크산 천연흑연 연 6만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100% 중국산이던 음극재 원료의 약 절반을 대체 추진(연합뉴스, 2024.3.13)

4. [비안보 영역] 미래 지향적 신(新)협력 공간 창출

□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한·중 신산업 협력 다변화와 기술 안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추진해야함

○ 미래 신산업 및 인구·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과 외연 확장이 필요함

-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수소차, 자율주행,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지정학적 민감도가 낮은 미래 교통·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기술 및 표준 협력 공간을 넓힐 수 있음
- 녹색 전환 공조: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분야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화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실버 경제 기반 마련: 양국 모두 직면한 고령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및 고령친화 산업 전반의 협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1월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을 위한 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 협력 MOU’를 동력으로 활용하여 실버·복지 분야의 제도적 협력 틀을 공고히 함

○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기술 안보 리스크 통제를 위한 명시적 경계 설정 및 지식재산권 보호도 필요

-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 ‘국경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여, 통관 단계의 위조품·침해품 차단과 분쟁 발생 시 신속 구제 절차를 제도화해야함(한국경제,

2026.1.12)

- 협력 경계 설정: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양국 공동 기준을 마련하고, 군사·안보 및 이중용도(Dual-use) 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경계 설정 작업이 필요함
- 기술 유출 사후 관리: 핵심 인력 이직, 합작법인(JV) 청산 시 기술 귀속 등 협력 종료 국면의 위험에 대비해, 계약 단계에서 기술 귀속·경업 금지·데이터 반환 조항을 명시하고, 양국 간 기술 유출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함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재개를 통한 통상 장벽 완화 및 시장 개방 대응이 필요함

○ 10년 만에 재개된 2단계 협상은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통해 서비스 수출 확대 및 현지 시장 안착이라는 질적 전환을 목표로 함

- 1단계가 교역량 중심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2단계는 서비스 수출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와 현지 시장 안착을 지향하며, 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한 영역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격상되어 높은 수준의 개방이 기대됨(연합뉴스, 2025.12.28; 전자신문, 2026.1.5)

○ (분야별 협상 의제) 문화·콘텐츠 및 게임에서는 콘텐츠 분야 비관세 장벽 해제와 게임 판호 발급 정상화 등 K-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기반 확보가 핵심 의제로 부각됨

- 한국 측은 콘텐츠 분야 비관세 장벽의 해소, 게임 판호 발급 정상화, 영화·드라마 공동 제작 활성화 등 K-콘텐츠의 중국 진출 보장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중국 게임산업의 경우 한국과 달리 외국기업의 현지 직접 서비스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판호 발급 외에도 합작·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접근 완화가 병행되어야 실질적 시장 진입이 가능함(한국무역협회, 2018)
- 법률·회계·의료 등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우리 금융기관의 중국 내 영

업 허가 요건 완화 등이 주요 협상 의제로 다뤄질
전망

-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제한, 소스코드 공개 요구 등 중국의 데이터 안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우리 IT 기업의 중국 내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
- C-커머스 대응: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확산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안전·품질 규제를 적용하고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보관·활용을 명시적으로 규율해야함
- 상호주의(Reciprocity) 견지: 중국이 외국기업에 부과하는 데이터 국내 보관 의무 등 비대칭적 규제 환경을 감안할 때, 한국 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비대칭 양보는 회피하고, 사회·문화적 민감 분야는 부속서·유보 목록에 명시해 정책 재량권을 확보함

VI. 결론

□ 본 연구는 트럼프 2기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와 이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대응을 분석하고, 2026년 5월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해석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함

○ 미국의 대중 압박은 전통 제조업 마찰을 넘어 첨단기술·자원·금융 전반으로 다각화되었으며, 중국은 트럼프 1기의 경험을 토대로 보복관세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대응체계를 구축함

- 중국의 기술(과학기술 자립자강), 산업(교역국 다변화·공급망 재편), 통상·안보(핵심광물 수출통제와 위안화 국제화), 거시(내수 중심 전환) 등의 정책들은 모두 대외 의존도 축소와 자립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 다만 지방 간 중복투자에 따른 과잉생산, 신·구 산업 간 성장 시차, 내수 부진 등 내부 모순을 동반하고 있어 질적 성장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음

○ 이와 같이 구조화된 중국의 대응체계는 단기 협상 압박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 양국의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회토류·핵심광물 통제와 기술 자립 기조를 유지한 중국은 회담 과정에서도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며 양보하지 않았고, 미국 역시 수출통제·기술 봉쇄 기조를 고수함에 따라 핵심 안보 영역에서는 양측 모두 입장을 굽히지 않는 교착이 형성됨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통상을 넘어 안보·지정학 의제까지 포괄하며, “〈표 3〉 미·중 충돌 영역 4분면 분석”에 따르면 양국은 갈등 해결이 아닌 갈등 관리로의 패러다임을 확립함

○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차단·통제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회토류·기술패권을 둘러싼 원론적 선언과 입장 확인에 그쳐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반면, 안보 민감도가 낮아 거래가 활발한 영역에서는 농산물 연 170억 달러·보잉 200대 구매

등 구체적 미니딜이 성사

○ 어느 한 영역의 합의가 다른 영역의 타협으로 연결되지 않는 비연계적(Decoupled) 협상 양식이 표준화되며, 향후 미·중 관계는 영역별 칸막이형 분절적 디커플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이러한 관리 국면은 어느 쪽도 결정적 우위에 있지 않은 잠정적 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협이 아닌 충돌 회피이며 역설적으로 충돌 영역은 확장될 전망

- 회담 이후 미 국방부가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 AI·로봇공학 등 신흥 기술 기업(알리바바·유니트리 등)을 추가하며 〈표 3〉의 [① 디커플링·고강도 통제] 영역을 오히려 확장

○ 동시에 안보 민감 영역이라도 미국 내 생산·소유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한 [② 관리 하의 거래] 영역이 함께 작동하며, 갈등의 전면화가 아닌 영역별 칸막이식 관리 구도가 명확해질 것

- H200 관리형 거래, 포드-CATL의 라이선스식 배터리 협력 등으로 〈표 3〉의 [② 관리 하의 거래]가 병행되고 있어, 영역별 디커플링 지속 전망

□ 이와 같은 미·중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에서 안보 민감도를 기준으로 한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실익을 극대화해야 함

○ 현재의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도 한국은 두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과 그 성과인 MOU를 토대로, 안보 민감 영역과 비안보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의 협력 기회를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함

- ‘투자의 미국, 소비의 중국’이라는 비대칭 구조를 활용하되, 한 국가의 규제를 준수할수록 반대 진영의 제재 대상이 되는 이중 규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안보 민감 영역은 “〈그림 10〉 안보 민감 영역 한·중 협력 다이어그램”과 같이 한·중이 협력 가능한 지점은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핵심

광물은 단기 안정 공급과 장기 중국 의존도 완화를 병행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추진

- 제품 생산단계와 진출 대상국가에 따라 안보 영역에서도 한·중 양국의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상할 수 있음
- 미·중 경쟁 상황에서도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에서 관리 가능한 구간에서는 명확한 기술 보호 장치를 전제로 협력의 실익을 취해야 함

○ 비안보 영역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 MOU의 실질적 이행을 토대로 미래 모빌리티·실버경제 등 신협력 공간으로 외연을 확대

- 한·중 FTA 서비스·투자 2단계 협상에서는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을 적용해 균형 있는 정책 재량권을 확보하고, 안정적 제도 기반 위에서 콘텐츠 분야 비관세 장벽 해제·게임 판호 정상화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실리적으로 추진해야 함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중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한-중 정상회담(중국 베이징, 2026.1.5)”, 2026.1.5.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2023.2.27.
- 석주현, “글로벌 핵심광물 동향과 전략광물 심층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에너지경제연구원, 2025.
- 연합뉴스, “배터리용 리튬·흑연서 희토류까지…핵심광물 ‘탈중국’ 시동”, 2024.3.13.
- _____, “한중FTA 10년, 흑자에서 적자로…‘서비스·투자’로 새판 짬다”, 2025.12.28.
- _____, “美 포드, 에너지 사업 덕에 ‘AI 인프라’ 수혜주 부상”, 2026.5.28.
- 전자신문, “美 다음은 中…한중FTA 2단계 재가동, 대중 무역적자 돌파구 될까”, 2026.1.5.
- 조선일보, “AI칩·메모리·파운드리까지 자립하는 中 반도 체… 美 덕분?”, 2025.9.25.
- _____, “D램 3강 구도 흔들릴까… 中 CXMT 상장에 메모리 시장 판도 변화 조짐”, 2026.6.11.
- 조세일보, “중국,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5곳 제재1년간 유예’”, 2025.11.10.
- 최원석, 오수현, 조성훈, 홍진희, 박보영,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정 활용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6.
- 한국경제, “韓·中 지식재산보호 협력 맺었지만, 해외 기술유출은 매년 늘었다”, 2026.1.12.
- 한국무역협회,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의미와 쟁점”, 『KITA 통상리포트』, 2018.
- Ang, Y., “China’s Economic Paradox”, *Project Syndicate*, 2024.
- Baker, J., “Is China’s cross-border payments network on the rise?”, *FXC Intelligence*, 2025.
- Baskaran, G. and M. Schwartz, “The Consequences of China’s New Rare Earths Export Restriction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25.4.14.
- Bown, C. P., “The US-China Trade War and Phase One Agreement”, Working Paper No. 21-2,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1.
- _____, “China No Longer Buys US Exports: Drawing the Right Lessons for the Next Trump-Xi Deal”,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6a.
- _____, “The Trump-China Trade Wars: Five Takeaways from US Imports in 2025”,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6b.
- Bruegel, “Datasets: Trackers, Dashboards and Dynamic Data,” <https://www.bruegel.org/datasets>.
- Caixin Global, “China to Scrap Import Tariffs for 53 African Nations on May 1”, 2026.4.13.
- Chor, D. and B. Li, “Illuminating the Effects of the US-China Tariff War on China’s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50, 2024, 103926.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 Guide to Trump’s Section 232 Tariffs, in Maps,” 2025.11.14.
- Fajgelbaum, P. D. and A. K. Khandelwal, “The Economic Impacts of the US-China Trade War”, *Annual Review of Economics*, Vol.14, No.1, 2022, pp.205-228.
- Fortune, “China Is ‘Doubling Down’ on Local Chip Development with a New \$47.5 Billion Fund: ‘The Size of the Fundraising Speaks for Itself’,” 2024.5.28.
- García-Herrero, A., M. Krystianczuk and R. Schindowski, “Which Companies Are Ahead in Frontier Innovation on Critical Technologies? Comparing Chin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Issue 08/2025*, Bruegel, 2025a.
- _____, “Radical Novelties in Critical Technologies and Spillovers: How Do China, the US and the EU Fare?”, *Working Paper Issue 07/2025*, Bruegel, 2025b.
- Global Trade Alert, “What the SCOTUS Ruling on

- IEEPA Means for US Tariffs”, 2025.
- Government of Canada, “Rare Earth Elements Facts”, *Natural Resources Canada*, 2026.
- Huang, T. and N. Véron, “China’s Private-Sector Rebound Continued in 2025, Fueled by ‘New Econom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6.1.20.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Limited(ICBC), 2024 Annual Results Announcement, 2025.
-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World Energy Outlook 2025*, 2025.
- International Energy Research Institute, *China Energy Data Report 2026*, 2026.
- Ipsos, “AI’s Perceived Impact on Job Creation, by Country,” 2025.
- Krueger, D., “Trump, Xi Must Get Rid of AI Compute,” *RealClearPolitics*, 2026.
- Meinhardt, C., S. Nong, G. Webster, T. Hashimoto and C. D. Manning, “Beyond DeepSeek: China’s Diverse Open-Weight AI Ecosystem and Its Policy Implications,” *Stanford HAI & DigiChina*, 2026.
-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Position on the So-called Excess Capacity Issue”, 2026.7.
-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i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Four Other Departments on Issuing the Reform Plan for Adjusting and Optimizing Discipline and Specialty Settings in Regular Higher Education [教育部等五部門關於印發《普通高等教育學科專業設置調整優化改革方案》的通知],” 2023.3.21.
http://www.moe.gov.cn/srcsite/A08/s7056/202304/t20230404_1054230.html
- Politico, “5 Charts Show China’s Oil Dilemma after US Strikes,” 2026.3.2.
- Reuters, “China to Favour Brazilian Soybean Imports in H1 Despite Renewed US Inflows”, 2026.1.28.
- Shin, W. and C. Choi, “Evolutionary State-Private Partnerships in the Electronics Global Value Chain(GVC) of the Asian Developmental State,”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40, No.4, 2025, pp.605-630.
- Sina Finance, “Base Salary of Financial Enterprise Executives Capped at 35% of Total Compensation: MOF Issues Notice on Strengthening Financial Management of State-Owned Financial Enterprises [金融企業高管基本薪酬不高於總額的35%！財政部發文加強國有金融企業財務管理],” 2022.8.3.
<https://finance.sina.com.cn/wm/2022-08-03/doc-imizirav6616195.shtml>
-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RMB Tracker: Monthly Reporting and Statistics on Renminbi(RMB) Progress Towards Becoming an International Currency”, 2025.
-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s Chip Exports Surge 73% as AI Demand Fuels Semiconductor Growth,” 2026.3.10.
- Tian, E., L. Wright and A. Feng, “China’s ‘New’ Strategic Industries Will Not Produce 5% GDP Growth”, *Rhodium Group*, 2026.
- U.S. Department of War, “DoW Releases List of Chinese Military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60H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2026.6.8.
- The Wall Street Journal, “What to Know About Trump’s Latest Tariffs,” 2026.6.3.
- _____, “China’s ‘Teapot’ Refiners, Targeted by U.S., Offer Financial Lifeline to Iran”, 2026.5.1.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5.
- _____,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Delivering for American Workers, Farmers, and Industry”, 2026.5.17.
- Williams, G., “Why Are Chinese EVs So Cheap?”, *Rhodium Group*, 2026.2.19.
- Xinhua, “Behind ‘Hefei Model’: How Reforms Reshape China’s Emerging Tech Hub”,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 _____, “China, U.S. agree on intergovernmental dialogue on AI,”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6.5.19.

Yang, M., B. Yang, S. Butler-Sloss and E. Graham,
“China Energy Transition Review 2025”, R.
Black(Ed.), Ember, 2025.9.9.

Zhao, W. Team, & Shenwan Hongyuan Macro.(2025,
September 26). Classic revisit | Anti-involution:
Why should we focus on local governments? [經典
重溫 | 反內卷：為何需關注地方政府?].
<https://mp.weixin.qq.com/s/v9I0EMlojKFjVutlC2ww3Q>

FKI 한국경제인협회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6년 8월 13일 | 발행인 류진 | 발행처 한국경제인협회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